

# 여야, 내년 예산안 558조 합의

재난지원금 3조원  
백신 9000억 반영  
한국판 뉴딜 일부 포함  
5조3000억원 감액  
순증 규모 2조2000억원  
오늘 본회의서 처리  
6년만에 법정 시한 지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흥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흥근·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안을 처리한다"며 이 같은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상에서 여야 간사들과 회

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을 조율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000억원씩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순증했다. 예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3조6000억원+알파(α)의 3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4400명분을 가정한 1조3000억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대책, 탄소중립 이행 등 예년에

없던 4대 신규 소요 예산에 보육·보훈·돌봄·노인·장애인·농업 관련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분을 더해 8조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큰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해 1조원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초중고생 대상 돌봄지원금 20만원 지급, 보훈수당 인상 등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 감액 가능 규

모는 5조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 가능 규모는 2조원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정 간 간극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여야는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 요구는 최소화함으로써 순증 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다.

민주당 여결위 간사인 박흥근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어려운 상황과 국민들의 힘든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감액을 하자는 여야의 공통 인식이 있었다"며 "감액을 최대한 해야 신규로 소요되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안전한 백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할 수 있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여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마지막 단계에서 가급적 추가적인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감액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민생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예산안의 총량이 합의된 만큼 이날 오후부터 이를 반영한 세부사업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예산안 법정 시한인 2일 오전 종료로 예산명세서(시트) 작업을 끝낸 뒤 여결위 등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 전북도의회 의정 소식

### “내년 전북도 예산 과학기술분야는 無”

#### 조동용 도의원,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 과정서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전북도 내년도 예산 8조에서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따르면 전북도 순수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120억원 정도라 주장하지만, 직접사업은 과학특전 4억원, 공학교육선도센터 운영지원 2,400만원, 여성이공계지원 1,800만원, 과학기술연구비 지원 1억5,000만원 등 총 7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광주, 전남 등 인근 타 지역의 과학기술분야 예산 및 사업과 비교했을 때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광주시는 산하 과학기술원에 한해 평균 2,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 자체 추진예산만 200억이 넘는 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 10만 명의 인력양성에 대해, 광주시는 이미 3만 명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다.

조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안이한 예산편성이다”라며 “전북형 그린뉴딜 핵심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전혀 없음을 지적, 향후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조동용 의원은 “나라로 빠지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영전문가 출신의 부지사 임명을 조속한 추진, 기간 중지되었던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또한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더 적극 나서야”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 의원은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제안 심사에 나선 최훈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전북도가 국가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309조였던 국가예산은 2020년 513조로 증가해 39%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북도 예산은 613조에서 763조로 증가해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도 인구는 전국 대비 3.5%이지만 예산은 1.5% 수준에 그쳐 국가예산의 불균형적 배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예산 대비 전북도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7년도 1.7%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도 국가예산 555조의 1.7%를 적용할 때 954,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확보한 예산 중 내국예산 등의 몫을 빼면 실제 국가예산의 1%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과 세원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서 설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지역 소외 청년들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열 것”

### 국회 사무처 소관 ‘청년과 미래’ 호남지역 대표에 박태람씨 선임



맞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고향인 호남지역 대표로 선임된 만큼 지방 소도시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호남지역 청년들은 수도권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지역 청년을 위한 대학생·청년가치관조사, 청년의 날 법제기념일 지정, 청년기본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의 정책비서와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 등을 지낸 박 본부장은 원광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북도 총학생회 연합 부의장,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법무부 법사관위원, 김제시재향군인회 이사 등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았다.

박 대표는 “20대 대학생 시절 대학생 인건과 교육여건개선 등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30대에는 청년으로서 청년문제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유호상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경제 정상궤도로”

###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방역 성과 경제로 연결 효과적 대응, 반등 원동력 방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기 위해 총력 다할 것”



문 대통령은 1일 “경기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 나가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9회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지수 등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확실한 경기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될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 뛰어넘어 2.1%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

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경제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이 올해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 경제실리부터 좋아졌다”며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지수 모두 크게 개선돼 11월 경제실리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며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한 달 밖에 남지않은 2020년 모든 부처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외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적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또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원했다. /뉴스

## 윤석열, 복귀... 법원 “직무정지는 회복불능의 손해”

추미에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뉴스

김영명의 의심되면 '1339'로

## 이낙연 “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처리... 檢개혁 피할 수 없는 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정기국회 회기 내 최종 처리를 부동의 전제로 해달라”며 “검찰 개혁은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발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사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조직적 반발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검찰개혁의 저항으로 비춰질 건 검찰 스스로

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그런 집단행동은 다른 어떤 공직 사회에서도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충분하지 되돌아보시면 좋겠다”며 “기밀과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성해 민주주의의 빈칸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당원계사관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분의 걱정이 크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상시적

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정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과 왜곡특별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4·3특별법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공정경제3법과 고용보합법 등 민생과 미래, 상생을 위한 법들도 차질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덕도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새로 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뉴스